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홍보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25개 성분검사 효율성 의문

양돈협, 자체 샘플조사 결과 대부분 미검출
해양수산부에 전 항목검사 철회 요청

양돈업계에서 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와 관련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검증됐다. 이는 최근 양돈협회가 일부 양돈장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배출시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25개 성분 가운데 대부분이 검출이 안 되거나 미량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 중 하나인 FIT시험연구원에 의뢰, 5개 양돈장에 대한 가축분뇨 성분검사를 실시했다. FIT시험연구원의 최종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이들 농장에서는 17개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한편, 검출된 성분 또한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극히 미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항목 가운데는 나프탈렌과 안트라센, 벤조(a) 안트라센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 "가축분뇨 성분이 거의 동일하므로, 샘플 검사만으로도 해양배출 양돈농가의 의무검사를 철회하거나, 가축분뇨에 기준치 이상 검출될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 양돈농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가축분뇨에 대한 25개 전 항목 성분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객관화하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검사결과가 실제로 양돈업계의 주장대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양돈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된 해양배출 관련 토론회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불필요한 성분검사 제외를 적극 검토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양돈농가의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편 양돈협회는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부에서 해양배출 농가가 가급적 개별적으로 성분검사를 의뢰하지 않도록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연말에 성분검사 의뢰가 급격히 몰려 내년 2월까지 성분검사를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거나 연말 성분분석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을 감안하여 15개 성분검사 기관에 10월 하순 이후 처리할 수 있는 물량 및 공동구매 가격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각 도협의회 및 지부에서 공동의뢰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진청, 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평가회 개최



▲ 사진은 호남농업연구소 관계관이 SCB액비를 이용해 재배한 벼와 원예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농진청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실천 현장을 순회 평가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지난 10월 4~5일 양일간에 걸쳐 농림부, 농촌진흥청, 양돈협회 등 전문가 40여 명이 이천, 여주, 영광지역을 방문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실천 현장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가축분뇨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지만 작물재배 이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중단됨에 따라 처리비용 증가 등 농가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자원화 확대를 위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협력과 새로운 기술의 모델개발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추진단지와 액비유통센터, 연구기관 시험포장 등 6개소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 추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토의를 거쳐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반영키로 했다.

가형로 농촌진흥청 친환경기술과장은 "그동안 가축

분뇨 이용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자연순환농업 4대 핵심분야 15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축분뇨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화 확대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내년 돈사 현대화 자금지원 개소당 2억8천만원 지원

- 양돈 150곳에 420억원, 한우 200곳에 272억원 지원 등

내년도 농림예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양돈, 한우 등 5개 축종에 대해 총 1천29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이 가운데 양돈은 150개소에 42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양돈은 한우 1개소당 약 1.36억원(272억1천6백만원/200개소)에 비해 1.4억원이 많은 개소당 2.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양돈협회가 FTA로 인한 양돈산업 생존대책으로 돈사시설 현대화 등 자금 지원에 돈사 신축의 경우 개소당 10억원을, 개보수농가의 경우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다.

한편 현대화사업 자금 지원대상은 브랜드 경영체(계열업체 포함) 및 참여농가와 전업농(양돈 1,000두 이상)이며, 단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이다.

☒ 9월 현재 가축분뇨 153만톤 해양배출

9월 현재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153만여톤으

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9월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153만6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5만5천톤보다 25% 감소했다. 한편 9월 한 달 동안에는 총 20만8천톤이 배출되어 전년동월 24만2천톤과 견줘 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던 해양배출량이 3분기(7~9월) 들어서는 62만2천톤을 기록해 다소 주춤했다. 3분기 배출량은 1년 전 75만톤에 비해 17% 감소했으나, 전분기(4~6월) 45만톤에 비해서는 38%, 1분기 46만5천톤에 비해서는 3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평균 월 20만톤씩 배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계획 물량인 220만톤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가축분뇨를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하여 2011년까지 전량 육상처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계획은 220만톤으로 이대로라면 감축 계획 물량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오는 11월~12월 지자체의 해양배출 감축노력을 평가하여, 내년도 분뇨처리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양돈협회는 실제로 2011년까지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등 다른 처리방법으로 전량 처리할 수 없는 양돈농가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강구에 나섰다.

☒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나온다

최근 농림부는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초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를 개최했다.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은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안전성과 품질 중심의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이 변화하는 등 축산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축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한 수준의 모델과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모델로 구분하여 단계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축산의 구성요소를 △환경보전 △자원순환 △가축건강 △경관보전 △경영관리로 설정하고 구성요소별 방향도 제시했다. 따라서 요소별로 대기·토양·수질오염 방지 관련 기준 및 가축분뇨 자원화 기준, 사육밀도 기준 및 HACCP 준수, 동물복지 등의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설정했다.

농림부는 지난 10월 17일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모델안 조감도를 제작키로 했으며, 이 조감도를 바탕으로 11월 중순경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후에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최종 모델 마련 및 보급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 가축분뇨 자원화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각각 공포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도 마련했다. 한편 시행규칙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확대했으나, 액비화시설 설치 시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한편 방류수질기준의 경우 총질소 및 총인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했으며, 액비

살포기준 또한 비가 내릴 때나 얼어붙은 토지에는 액비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종전에 고시에서 정하던 액비살포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했다.

☒ 김포축협, 액비살포시연회 개최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은 지난 10월 5일 양일간 하성면 봉송리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실시된 제1회 '김포금쌀 대축제 한마당잔치'에서 액비시연회를 가져 축제장을 찾은 경종농가 및 소비자들로부터 주목 받았다. 김포축협은 김포금쌀연구회와 함께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생산된 김포금쌀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과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악취가 전혀 없는 숙성이 잘된 액비를 살포하면서 자연순환농업을 홍보했다.

임한호 조합장은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이용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김포금쌀 축제기간 동안 자연순환농업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액비 살포 시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축협은 지난해 김포금쌀연구회와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하고 올 초에 김포금쌀연구회 회원

들의 논 30여만평에 액비를 살포했다.

☒ 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로 사료값 대응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축산분뇨자원사업과 사료값 상승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가축분뇨자원화 기술 개발을 통한 사료값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청장은 "우리 축산업은 FTA 등으로 인한 개방압력과 국제 사료 곡물 값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 분뇨처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사료 자원 개발과 자연순환농업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홍업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전남 무안·신안)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는 만큼 자연순환농업 시스템 확보를 위해 실현가능한 자원조달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액비저장조의 가장 큰 민원이 악취 문제인 만큼 발효기간 단축 등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연구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사료값이 30%이상 상승에 따라 사료값 비중이 생산비의 60%에 달하는 현실에서 축산업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급조사료 확충을 위해서라도 신제품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FTA 개방화에 직면하고 있는 축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사료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환경오염 주범인식 자원화로 불식하자